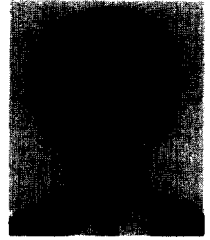


국내 및 외국 박사과정의 비교

강원대학교 자연대학 미생물학과 교수 변우현



국내 박사과정과 국외 박사과정을 어떤 측면에서 비교할 것인가는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오히려 비교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교육이 아직도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정상궤도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가능한 개선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믿는다.

어느 집단에서나 마찬가지로 하겠지만 대학원생들은 적어도 경쟁적 분위기에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 등 모든 면을 들어내놓고 남으로 부터 평가받고 또 자신이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부족한 점을 발견, 수정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을 통해 교수가 개개인을 파악함으로써 각자의 재능에 따른 연구업무의 부과, 즉 인적자원의 효율적 가동이 가능하고 이것이 개인 뿐 아니라 소속 연구단체, 나아가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도 최선의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미 선진국들이 오랜동안 발전, 확립시켜온 현대문명을 도입, 빠른 속도로 정착시켜가며 선진국으로의 도약까지를 넘보고 있는 것은 높은 교육열, 근면성 등의 국민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이런 성취가 대학원교육의 정상화에 따른 학문적 지원 및 기여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향후 경제성장과 문화화가 지속되기 위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문화화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는 접어두고) 지금까지의 고급인력 수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와 교육제도의 시행착오적 변경이 대학원 박사과정제도의 실행에 직접, 간접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간략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학원 박사과정제도의 정착 및 정상화는 서울과 지방소재 대학간의 차이나 또 같은 지역 학교간

에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시기적으로 약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 중반이전까지는 박사학위가 구제도에 의한 논문 제출만으로도 수여되던 시기로서 연구 기자재의 부족현상과 더불어 대학원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미했었기 때문에 다수의 의욕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 혹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대부분 유학을 떠나던 시기였다. 박사학위를 수여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구소나 대학에 정착하여 이미 그 연구업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른 사람들이었으며 학칙상 개설되어 있는 박사과정에는 교과과정, 기타 재정적 여려 여건이 학생으로 하여금 입학할 결심하기 힘들게 한 시기였다. 둘째 시기는 구박사제도가 형식상이나마 없어지고 박사과정을 마친 경우에 한해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이 부여되는 신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부터 '박사과정'이라는 용어가 보편화 되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박사과정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각기관이 노력하기 시작한 때이다. 정상화에 기여도가 높았던 기관은 현 과학기술원 학사부(당시 과학원)이었고 이는 교수진과 연구시설 등의 연구여건 뿐 아니고 석·박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병역특혜 및 학비·생활비 지원 등이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점차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차관자금의 과학기자재 도입을 위한 배정이 실시되었고 연구비 내지 연구용역의 수혜가능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과학원 이외 대학의 대학원생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이 귀국, 국내에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연구분위기도 새롭게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번째 시기는 80년대 이후로써 각종 차관자금(LBRD, OECF

및 대영차관 등)에 의한 자연계열 실험실습 기자재의 대폭적인 도입과 문교부 특성화 연구비, 과학재단의 각종 연구지원사업 등으로 연구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또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이 해당분야 뿐아니라 자연과학 전 분야 연구를 활성화시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대학원생들의 참여가 적극 유도된 시기이다. 그러나 대학원교육이 점진적 정상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교육정책의 변화는 80년부터 시행된 대입학력고사제도 즉 선시험 후지원 제도였다고 생각된다. 이 제도의 시행초기 그 부작용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2-3년이 지나면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외에 특별히 지방대학교의 대학원교육에 심한 타격을 초래하게 되었다. 종래까지의 선지원 후시험 제도하에서는 적성이나 관심에 의해 과를 선택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몇몇 섞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에 의해 학부 학생들의 면학적 분위기가 유도될 뿐아니라 이들이 졸업후 대학원에 진학,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수행을 돕게 됨으로써 후배들에게 규범이 되고 나아가 후배들을 통솔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학력고사점수에 의한 과의 선택은 적성과 관계없이 주로 매스컴이나 고교 교사들에 의한 예상 컷트라인을 따라 자기점수를 남에게 오해받지 않는 좁은 폭의 과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매우 동일한 학생들로 어느 과의 한 학년이 구성되게 되었으며 이는 과에 따라서는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존립 의미를 허물어 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몇몇 서울소재 대학들의 대학원교육이 급격히 정상제도에 오른 것도 사실이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 파악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있는 연구업무 수행이나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과정을 통한 가혹한 채찍질을 접어두고 교수들의 연구업무의 수행에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학생만이라도 입학하기를 고대하는 처지가 되었다. 교육, 연구용 기자재의 구비나 교수자질 등 교육여건이 여러 대학

들간에서 완전히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 차이가 많이 완화되어 가^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대학입시제도의 수행으로 대학원교육의 정상화는 학교에 따라 선시험 후지원 제도를 시행한 8년 동안 퇴보했을 뿐아니라 대학연구기능의 단절에 따른 공백기를 회복하는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퇴보기간은 그보다 훨씬 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입안 당시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겠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바로 수정하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연구 기자재의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우수두뇌의 해외유출을 막기위한 재정적 지원 및 학문탐구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여건 특히 교수자질 및 연구분위기 등의 구비가 충족되면 대학원교육은 저절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나, 첨가하여 인재의 지나친 편중을 막아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해져서 모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시점에서 외국 박사학위과정과 국내 박사학위과정간에 운용상의 차이는 과정생들이 얼마나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있는가의 차이이며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들이 국내에서 박사과정에 주저없이 입학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연구비 세출항목에서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지급한도를 훨씬 높이고 그만큼 단위 연구비의 액수를 증액 시킴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기업체부설 및 국공립연구소의 연구비 투자증대로 학위소지자의 대폭적인 수용태세를 갖추는 것도 국내 박사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기본적인 해결이 선행된다면 서로의 경험에 의한 자기연마로 학문의 발달에 각자가 모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박사과정도 외국의 그것에 못지않은 인재들로 넘쳐나서 탁월한 연구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